

‘5극3특 균형성장전략’ 확정... “수도권 일극체제 재편”

권역별 메가시티... ‘초광역특별협약’ 신설
포괄보조 3.8→10.6조... 재정 자율성 강화
햇빛연금 조성·인구소멸지역 기본소득제

정부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중심으로 재편하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30일 확정했다.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세종에서 첫 본회의를 열고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 144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설계를 발표했다.

5극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정부는 우선 국가산업전략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권역별 메가시티를 조성,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계획이다.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법상 지역발전투자협약의 폭을 넓혀 중앙·지방·민간이 공동 추진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신설해 ‘중앙과 지방의 공동설계’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AI 인력 양성을 위한 AI 특화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5극3특별 연구인력 혁신센터를 확대할 예정이다.

제조업 중심 중소·중견기업이 미래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부터 사업 전환까지 종합 지원한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 브리핑실에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과 기업을 연계한 탄력적 학사제도 운영, 직업계고-전문대학-기업 간 학제 연계 등을 통해 지역 산업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

생활권 전략으로는 혁신도시 활성화와 함께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5극3특 체계로 국토 공간을 재편한다.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교통 소외 지역에 수요응답형 택시·소형버스 운영을 허용하고 지자체 주도 사업으로 재편·확대한다.

월 교통비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대중교통 정책패스 K-패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주요 거점별 환승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통합요금제를 도입해 통합환승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역에서도 서울처럼 편리한 출퇴근, 통

학, 관광 등 이동할 수 있는 60분 생활권을 구축한다. 거점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선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전국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망 11개 사업도 적기에 개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에서도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지역의대 신설·확충, 지역의사제·공공의료사관학교 추진, 의료취약지 비대면 진료 확대, 소아·응급 의료체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 농어촌 주민의 새로운 소득 안정 장치로 ‘햇빛연금’을 시범 조성하고, 인구소멸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제’를 도입한다. 지방시대의 예산 편성 사전 조정권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및 포괄보조를 대폭 확대해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포괄보조 규모를 올해 3조8천억원에서 내년 1조6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지자체의 자율성·책임성을 강화한다. 김경수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정책 실행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각 부처의 칸막이, 시·도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정진욱 “中企, 지속성장 위한 정책 마련 시급”

각종 혜택 상실·규제 확대 등 우려에
중견기업 도약 미루는 ‘피터팬증후군’



에서 유예 기간 연장을 선택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2년부터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되돌아온 기업(208개)이 새로 중견기업으로 올라선 기업(163개)보다 많아졌고, 이듬해에는 차이가 더 벌어지면서 성장을 택하기 보다는 각종 혜택을 유지하려는 중소기업들의 움직임이 한층 더 뚜렷해졌다.

정부는 2014년 3년간의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를 처음 시행한 뒤 2024년에는 이를 5년으로 확대했고, 올해 9월부터는 중소기업 해당 매출 기준도 1천500억원에서 1천8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전환을 회피하며 성장을 포기하는 현상이 오히려 심화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

업이 성장 과정에서 규제 증가와 지원 축소로 인해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규제 현실화를 주문했다.

정진욱 의원은 “최근 몇 년간 다수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전환을 두려워하며 성장을 멈추고 있다”며 “특히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처럼 혁신 역량이 중요한 업종에서조차 혜택 상실의 식혜 투자를 지연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2023년 한국경제인협회 자료에 따르면 자산총액 500억~1천억원 미만 중소기업에는 4개의 규제만 적용되지만 중견기업 기준인 5천억원 이상 기업에는 최대 185개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된다”며 “결국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올라가는 순간 혜택은 사라지고 규제만 눈덩이처럼 불어나 성장을 포기하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조계원,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 선임

정가 프리즘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이 광주·전남을 대표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의 실질적 심사와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옛 계수조정소위) 위원에 선임됐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 50명으로 구성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올라온 예산·결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역할을 담당해 ‘상임위의 꽃’이라고 불린다.

특히 50명의 예결위원 중 15명 안팎으로 구성되는 예산심사소위는 ‘꽃 중의 꽃’으로 불리며 국회 예산 심사 막판에 예산을 삭감·증액하며 조정하는 막중한 핵심 역할을 맡고 있어 많은 의원들이 입기 중 단 한번이라도 선임되기를 희망하는 자리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정책수석으로 일한 조계원 의원이 예결소위 위원에 선임

됨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의 원만한 협조 속에 광주·전남의 숙원사업 해결에 청신호가 켜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조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와 예결위 활동을 통해 ▲여수 글로벌 아레나 건립 ▲남서울-여수 직선 고속철(가칭 한반도 KTX) 건설 ▲여수공항 활주로 연장 및 국제선 기반 마련 ▲여수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 등 여수와 전남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과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해 왔다.

조계원 의원은 “광주·전남은 하나라는 생각으로 지역 산업·교통·문화 인프라 확충과 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서겠다”며 “광주·전남 국회의원, 전남 22개 시·군 및 광주시, 전남 도와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심의번호
220603-중-139779